

**환경평가, 올해부터 탄력운영**

올해부터 환경영향평가제가 지역별·사업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내국인들이 선박을 주문할 때에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수출용 선박건조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은행회관에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업들이 공장이나 시설 등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때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3개 분야 23개 항목을 모두 심사받도록 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역이나 사업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환경시설공사를 발주할 때 환경 관련 공사실적을 중점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전문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소음피해 지자체에도 책임 묻는다**

해마다 급증하는 각종 공사장의 소음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배상책임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소음과 진동 관련 환경분쟁은 2000년 49건에서 2001년에는 103건으로 늘었고 2002년 11월말 현재 205건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2배 정도씩 증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지자체는 그동안 공사장 소음에 대해 사업자와 주민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방관자적 태도를 보여왔다"며 "올해부터는 공사장 소음피해에 관련된 환경분쟁을 조정할 때 지자체에도 배상책임을 물리겠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이에 따라 지자체가 소음

올해부터 환경영향평가제가 지역별·사업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내국인들이 선박을 주문할 때에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수출용 선박건조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은행회관에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피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문제의 공사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소홀히 했거나 소음민원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아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킨 경우 배상책임을 물릴 방침이다.

**환경부, 하수처리장 329곳 신설**

올해부터 오는 2006년까지 총 사

업비 9천286억원이 투입돼 소양강댐 등 전국 8개 다목적댐 상류지역에 329개소의 하수처리장이 건설된다.

또 유역내 신규 건설되는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는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되고 처리장 적정 운영을 위해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환경부는 지난 12월 상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다목적댐 상류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이 저조하다고 판단, 하수도보급률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처리장 확충계획을 확정했다.

**창원 영세 배출업소 오염 방지시설 부족**

올해부터 부영양화 원인인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총질소(T-N)와 총인(T-P)에 대한 배출기준이 강화되지만 경남 창원지역 영세 배출업소 가운데 대다수가 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

최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 수질환경보전법에는 현재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과 부유물질(SS) 기준 등만 적용받던 것이 총질소·총인까지 적용하고 방류수 배출허용기준도 각각 60ppm과 8ppm으로 강화됐다. 그러나 이 같은 수질 오염 물질을 유발하는 시내 식품가공 및

파혁제조, 도금업체 19개사 가운데 저감시설을 갖춘 곳은 일부 대형업체인 4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TV·냉장고 등 재활용 의무화**

올해부터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플라스틱포장재에 분리수거를 위한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하며, 텔레비전, 냉장고, 타이어, 윤활유 등은 재활용 의무대상이 된다.

정부는 지난 12월 10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자원 절약재활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은 또 ▲폐기물부담금을 플라스틱 원료인 합성수지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으로 한정하고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등의 신제품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구(舊)제품을 무상으로 회수하며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주류, 청량음료의 제품값에 빈용기 보증금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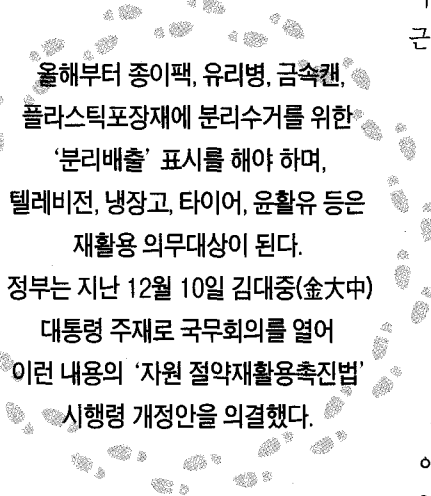
한편 신국환(辛國煥) 산업자원장관은 2011년까지 에너지 총소비 증가율을 연평균 3.1%로 낮추고, 남북한 통합에너지 체계 구축을 통해 에너지부문의 통일비용을 절감하며, 대체에너지 보급을 2010년까지 5%로 확대하고,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3대 중점 기술개발' 분야

로 선정하는 내용의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안'을 보고했다.

**환경부, 산업단지내 소음기준 높여**

앞으로 국가산업단지내 주거·상업지역 소음기준이 일반 생활지역 소음기준과 동등하게 적용된다.

최근 환경부는 그동안 소음공해의 사각지대였던 국가산업단지내 주거



·상업지역 주민들을 위해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자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 올 하반기부터 적용돼 산업단지내 주거·상업지역 소음기준이 현행 70dB(전화벨소리수준)에서 아침에는 65dB, 낮에는 70dB, 밤에는 55dB로 변경된다.

이와 관련 사업자가 공사시 소음기

준을 초과하게 되면 작업사전조정과 소음원 사용기간 제한, 방음·방진시설 설치 및 소음원 사용 금지는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작업중지나 폐쇄명령 조치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전체 12개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경남 창원, 전남 광양, 전남 여수, 울산 온산, 부산 명지녹산 등 5개 단지내 주거·상업지역 주민 60여만명이 이로 인해 소음공해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관련 규제법이 없어 최근 3년간 관련 민원건수는 1천여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확대**

댐건설, 도로건설, 온천원지구개발사업이 사전환경성영향평가 사업대상 범위에 추가되고 법적 규제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울러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간 중복된 평가항목이 개선되고 대상사업 특성에 따른 일부 항목을 집중 평가토록 하는 중점평가제도가 내실화 된다.

환경부는 지난 12월 4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사업 조정을 위한 법령개정안 마련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 추가될 사전환경성협의 대상사업은 4km이상 도로신설

및 2차선·10km이상 도로확장 등 도로건설사업과 면적 200만㎡ 또는 용량 2천만㎡이상 댐건설사업, 온천 개발계획지구 등 총 3개 분야이다.

**환경부, 건축도로 VOCs배출기준 마련**

국내에서 처음으로 건축용도로에 VOCs(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 기준이 마련된다.

아울러 설정된 배출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한해 환경부담금을 징수하는 등 VOCs 규제책이 마련되고 방지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건축도장은 수성도료나 천연 식물성 도료로 전환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기준안이 설정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04년부터 모든 페인트제품은 VOCs 함량 기준을 준수해 생산해야 하고 이를 어길시에는 초과량에 비례해 환경부담금을 납부해야 된다.

**환경부, 방음벽에 배수로설치 의무화**

최근 환경부가 확정·발표한 '방음벽 성능 및 설치기준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방음벽에 KS(한국산업) 규격이 적용되고 빗물 고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방음벽 주변에 배수로 및 방호책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러나 환경부가 당초 마련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방음벽 설치후 5년마다 평가관리를 시행한다거나

설치업체의 공사비 10%를 예치금으로 납부하는 등 사후관리방안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한편 소음·진동관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최근 환경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방음벽 설치후 최소 17년이면 현행 소음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환경오염업체 무더기 적발**

인천지역 도색업체와 폐기물 수집

국내에서 처음으로 건축용도로에 VOCs(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기준이 마련된다. 아울러 설정된 배출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한해 환경부담금을 징수하는 등 VOCs 규제책이 마련되고 방지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건축도장은 수성도료나 천연 식물성 도료로 전환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운반업체 등이 환경을 오염시키다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지검은 지난 7월 1일~10월 30일 인천 검단지역과 남동공단 등의 환경오염업체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 무신고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업체 55곳과 폐수·대기오염물질 무단 방류 21곳, 각종 폐기물 부적정보관, 처리업체 8곳을 적발했

다고 지난 12월 5일 밝혔다.

이 가운데 서구 오류동 자연녹지지역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매월 400t여의 철구조물에 도색작업을 벌여온 변모(40)씨 등 도장업자 3명을 구속했다. 또 수도권생활쓰레기매립지에 사업장 폐기물인 폐합성수지 800t여를 몰래 반입, 매립한 H환경개발 대표 손모씨를 구속하고 불법 매립을 눈감아준 주민감시요원 1명을 불구속했다.

이밖에 폐수 25t을 무단 방류한 회로기관 제작업체 대표 유모씨 등 환경오염 업체 관계자 136명을 불구속했다.

아울러 경기·인천지역 환경오염업체 29곳을 상대로 불법 사실을 기사화 할 것처럼 한 뒤 모두 1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모 환경신문 기자 김모씨를 구속했다.

**“성공불제” 방식 축산폐수 처리시설 국내최초 건립**

효과가 나타나야 사업비를 지불하는 ‘성공불제’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국내 최초로 영암에 건립된다. 영암군은 지난 11월 27일 관내 축산폐수를 한데 모아 처리하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성공불제 방식으로 건립키 위해 최근 환경부, 전남도와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군은 영암읍 부근 4천여㎡ 부지에 60억원을 들여 1일 70t 처리 규모

의 폐수처리시설을 2005년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 처리시설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부지선정,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실시시설제, 공사 발주 등을 도맡아 하고 완공 후 9개월간 시험운동을 거친다”면서 “시험 결과 성공을 거둘 경우에만 사업비를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신기술을 보유하고도 성공 여부가 불확실해 이를 현장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환경기술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기술 실용화 촉진규정’을 제정, 성공불제 방식을 채택했다.

**표준, 다중 대기 배출가스 자동측**

**정기 개발**

질소산화물과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 공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각종 대기 오염물질을 동시에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국내에서 처음 개발됐다.

한 표준과학연구원 환경계측그룹(연구책임자 김현호 책임연구원)은 (주)켄비텍과 공동으로 공장 굴뚝에 적용될 ‘다중 대기 배출가스 측정기’를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배출 가스 측정기는 다중 창(窓)을 갖는 비분산적외선 흡수법(NDIR)을 이용, 오염물질간 간섭을 제거하고 실시간으로 여러 종

류의 오염물질을 동시측정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굴뚝의 시료채취 장치는 많은 양의 수분을 포함하고 있어 측정을 방해하는 만큼 ‘직접 침투 건조 시스템’을 함께 개발, 굴뚝 내 시료의 수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연구원은 “정부가 대기오염 배출시설물에 대해 자동 측정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이 장비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질소산화물과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 공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각종 대기 오염물질을 동시에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국내에서 처음 개발됐다.  
한 표준과학연구원 환경계측그룹(연구책임자 김현호 책임연구원)은 (주)켄비텍과 공동으로 공장 굴뚝에 적용될 ‘다중 대기 배출가스 측정기’를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나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모두 외산”이라며 “이 장비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만큼 앞으로 수출 상품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절수기 설치의무 다소 완화**

목욕탕과 숙박업소 등에 적용되던 절수기 설치의무가 올해부터는 다

소 완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최근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의 경우 절수기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매립형 수도꼭지에 대한 절수기 설치기준 준수 의무를 유보하는 방향으로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객실이 10개 이상인 여관급 숙박업소의 경우 1실, 호텔급 숙박업소는 객실수의 5% 범위 내, 목욕탕의 경우 샤워기 2개 범위 내에서 절수기가 아닌 일반 수도꼭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절수기 설치를 위해 벽면을 해체해야 하는 업소는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수도꼭지를 교체할 때 절수기를 장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환경부,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오는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오염총량관리제의 기본방침이 마련됐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기본방침에 따르면 우선 시행초기인 2004~2010년 동안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은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로 한정하고 총량관리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은 목표수질×10년 평균 저수량으로 계산해 할당키로 했다. 목표수질은 3대강특별법에 의해 별도로 고시된 ‘목표수질 설정수계구간의 유역’에 기초해 설정하

고 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이 달성 되도록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시 총량관리단위유역을 소유역으로,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이를 개별오염원별로 세분화해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삭감목표량과 지역개발할당량(오염원자연증가+개발계획)을 산정해 시행계획기간동안 연차별로 배분토록 하는 반면 공공·민간부문 사업자가 삭감목표량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총량초과과과금 부과, 조업정지 등 법적 제재가 가해질 방침이다.

이밖에 오염원조사, 수계환경조사, 오염부하량 산정 및 수질 모델링 등 기술적인 사항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전문가의 연구·검토를 거쳐 기술지침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번에 제정된 기본방침에 따라 기본계획을 작성해 낙동강수계는 오는 2004년 1월까지, 금강·영산강수계는 2004년 7월 이전까지 승인 신청하도록 했다.

**자원재생공, 폐기물 감량화시설 감면**

올해부터 폐기물 감량화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에는 설치비가 지원되며 감량시설의 세금도 감면된다.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지난 11월 26일 국내 다량 폐기물 발생업체 636

개소를 대상으로 폐기물 감량화 제도를 추진한 결과 지난해 폐기물 발생량이 전년대비 5.6% 감소하는 등 감량화제도가 정착되고 있다고 판단, 올해부터 기업의 적극적 참여 동기부여를 위해 이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생공사는 에너지절약 또는 자원재활용 효과가 있는 감량 시설에 대해 0.03%의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기타 세부적인 방안

**올해부터 폐기물 감량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에는 설치비가 지원되며 감량 시설의 세금도 감면된다.**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지난 11월 26일 국내 다량 폐기물 발생업체 636개소를 대상으로 폐기물 감량화 제도를 추진한 결과 지난해 폐기물 발생량이 전년대비 5.6% 감소하는 등 감량화제도가 정착되고 있다고 판단, 올해부터 기업의 적극적 참여 동기부여를 위해 이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을 관계기관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환경신기술 검증비용 50% 지원**

올해부터 처음으로 중소기업에 한해 환경신기술 검증비용의 50%가 무상 지원된다.

지난 11월 25일 환경부는 환경기술개발 실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우선 올해 총 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사업시행주체를 환경기술검증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위임해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은 환경관리공단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원여부 심사를 받도록 했다.

**환경부, 용 환경기초시설투자 대폭 확대**

올해 4대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의결된 4대강 수계관리기금 규모는 총 5천 31억 124억 8천 만 원으로 지난해 3천 124억 원에 비해 70% 증액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한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가 올해부터는 부담금 요율이 톤당 110원에서 120원으로 인상되는 등 4대강 물이용부담금이 본격 징수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중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토지매수 등 수질개선기반조성기금 규모는 3천 404억 원이다.

**환경부, 화학물질조사 소비·유동까지 확대**

환경부는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총체적인 종류와 양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산업체뿐만 아

나라 농약이나 가정용 살충제 등 제품의 소비·유통단계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6일 “비점 오염원인 농약과 가정용 살충제 등은 별도의 오염방지시설이 없어 인체에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실태나 배출현황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또한 지난 99년부터 실시해온 산업체에 대한 배출량 조사도 올해부터는 대상업종을 현행 23개에서 28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대상 물질도 160개에서 240개로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제품 판매량 등의 유통자료와 배출계수 등을 활용해 생활환경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을 시·도별로, 또 대기·수계·토양 등 매체별로 각각 구분해 병행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농약 ▲자동차(휘발유, 경유, LPG) ▲가정용 살충제와 접착제 등 용제함유제품 ▲전지 ▲조명기구 ▲세탁업 ▲도장관련업 ▲인쇄출판업 ▲연료소매업 등 9개 배출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을 점차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서 기업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량 저감 노력을 지속

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속도로 소음피해 3억8천만원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8일 경기도 하남시 아파트 주민 1천113명(279가구)이 중부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정신·재산적 피

결과 도로변 주거지역의 소음환경 기준인 주간 65dB(데시벨)과 야간 55dB을 모두 초과하는 측정치가 나왔다.

조정위는 한국도로공사는 신청인 아파트의 모든 층의 방음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돼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중부고속도로의 최근 3년간 이익인 2천383억원과 방음벽 설치비 연평균 7억원을 비교해 볼 때 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평택 현곡 등 3개 산업단지의 폐수처리장 건설공사가 올해 착공되며 장항 원수 등 5개 농공단지 처리장은 신·증설된다.**  
환경부는 산업폐수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평택 현곡, 천안4, 논산지역 산업단지내 공단폐수처리장 건설공사를 올해 73억원을 들여 착공, 2004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3개 폐수처리장 건설**

평택 현곡 등 3개 산업단지의 폐수처리장 건설공사가 올해 착공되며 장항 원수 등 5개 농공단지 처리장은 신·증설된다.

환경부는 산업폐수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평택 현곡, 천안4, 논산지역 산업단지내 공단폐수처리장 건설공사를 올해 73억원을 들여 착공, 2004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곳 중 △평택 현곡처리장은 하루평균 시설용량 5천톤, 총 사업비는 140억원 △천안 제4처리장 7천톤 124억 8천700만원 △논산처리장은 2천톤 52억5천만원 규모이다.

해를 입었다며 8억5천51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데 대해 한국도로공사와 남광토건(주), 하남시에 대해 3억7천950만원을 배상하고 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는 지난 11월 25, 26일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고속도로와 인접한 아파트의 소음도를 측정하

